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10조...“성실상환 인센티브 강화”

### 소상공인 11만4000명 감면 대부업권 4개사도 첫 가입 채무 5~10% 추가감면 유도 재기프로그램 전남 등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금액이 28조원에 육박했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금액은 27조7000억원, 신청자는 17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실제 약정을 체결한 금액은 9조8000억원(11만4000명)이다. 연도별 신청액은 2023년 5조3000억원, 2024년 9조3000억원, 작년 11조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작년 약정 채무액은 4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2% 늘었다. 금융위는 지난해 7000억원 규모의 추가 경영예산 반영과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 효과로 신청·약정 실적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제도개선 시행 이후(지난해 10월~12월) 월평균 신청 채무액은 약 9089억원으로 종전 대비 약 31% 증가했으며, 월평균 약정 채무액은 약 5072억원으로 120%가량 증가했다. 그간 협약에 참여하지 않았던 대부업권도 새출발기금에 합류했다. 리드코프, 바로크레디트대부, 씨나캐피탈대부, 저스트인타임대부 등 4개 우수 대부업체가 올해 1월 협약기관으로 가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 보유 채무도 채무

조정 대상에 포함돼 지원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최근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갖고 올해 중점 추진사항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성실한 채무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우선 매일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잔여 채무를 일시 상환하면 잔여 채무의 5~10%를 추가 감면하는 조 기상환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중개형 채무조정에서는 부실우려자주

(90일 미만 연체)가 1년간 성실상환할 때마다 적용금리를 10%씩, 최대 4년간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최초 적용금리 9%를 적용받은 차주가 성실 상환할 경우 2년 차에는 8.1%, 3년 차에는 7.2%로 금리가 낮아지는 식이다. 금리 하한선은 3.25%로 설정된다. 상환유예 사유도 현행 채무자 본인의 질병, 휴·폐업, 중증질환 외에도 출산, 육아 휴직, 중증질환 가족 부양 등으로 확대하고, 1년 이상 채무조정 분계계획을 이행한 성실상환자의 경우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

면 2개월 내 상환유예를 허용할 방침이다. 지역사회와 협업도 강화한다. 부산으로 한정된 지역연계 범위를 전남, 전북, 경기, 경남, 대구 등 전국 9개 지자체로 확대하고, 상반기 내 순차적으로 대상 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 및 제도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부산 소재 경영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경우 부산시가 운영 중인 경영컨설팅·교육, 금융지원 및 폐업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mailto:aura@gwangnam.c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렴 실천 소통간담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근 지역 본부장, 센터장 및 중간관리자 등 11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 소통 및 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소상공인 정책 실행의 최일선에 있는 관리자들의 청렴 의식을 제고하고 2026년 중점 추진 전략과 기관장 경영방침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 부영그룹 신임 회장에 이용섭 전 광주시장

### 이종근 창업주와 공동 경영

부영그룹이 이용섭 전 광주시장(사진)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하며 공동 경영 체제로 전환했다. 2일 부영그룹에 따르면 이 신임 회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퇴임한 이희범 전 회장의 뒤를 이어 그룹 경영 전면에 나선다. 향후 창업주인 이종근 회장과 함께 그룹을 이끌 예정이다. 이 회장은 제14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관세청장과 국제청장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 장관을 역임한 정통 경제 관료다. 청와대 혁신관리수석비서관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고, 18·19대 국회의원을 거쳐 민선 7기 광주시장을 맡아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추진했다.



부영그룹은 “부동산·건설 정책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행정·경제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을 갖춘 인사”라며 “그룹의 내실을 다지는 동시에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책임자”라고 평가했다. 이 신임 회장은 “그동안 축적해 온 경영 기반 위에서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겠다”며 “신뢰받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건설·주재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료 출신 회장의 합류가 사업 전략과 대외 협력 구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mailto:aura@gwangnam.co.kr)

## 가계대출 금리 4개월 연속 상승...주담대 4.29%

### 14개월만에 최고...예금금리 하락에 예대차 0.17%p ↑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연속 상승했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기관 가중 평균 금리’ 집계 결과, 지난 1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 금리는 연 4.50%로 전월보다 0.15%p 높았다. 이는 지난해 3월(4.51%)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4.29%)과 전세자금대출(4.06%) 금리가 각각 0.06%p, 0.07%p씩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은 2024년 11월(4.30%) 이후 1년 2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다. 반대로 신용대출(5.55%)은 0.32% 떨어

지면서 3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형 금리 비중은 한 달 사이 86.6%에서 75.6%로 11%p 줄었다. 고정금리는 지표인 은행채 5년 물 금리와 함께 높아졌지만, 변동금리의 경우 단기 금리 하락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대출 수요가 변동금리로 이동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1월 기업 대출 금리(4.15%)는 0.01%p 떨어졌다. 대기업(4.09%) 대출 금리가 0.01%p 올랐지만, 단기 시장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중소기업(4.21%) 대출 금리가 0.03% 낮아졌기 때문이다. 가계와 기업을 통틀어 전체 은행권 대출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2.77%)와 금융채·CD(양도성예금증서)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2.82%)가 각각 0.12%p, 0.13%p 떨어졌다. 은행권 전체 대출 금리는 오르고 예금 금리는 떨어지면서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 즉 예대금리차(1.46%p)는 0.17%p 커졌다. 신규 취급 기준이 아닌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2.24%p)도 0.01%p 확대됐다. 은행 외 금융기관들의 예금 금리(1년 만기 정기예금·예탁금 기준)는 신용협동조합(2.84%), 상호금융(2.74%), 새마을금고(2.88%)에서 각 0.04%p, 0.06%p, 0.07%p 상승했다. 상호저축은행(3.00%)에서만 0.02%p 떨어졌다. 대출 금리의 경우 상호저축은행(9.44%+0.22%p)·신용협동조합(4.55%+0.06%p)·새마을금고(4.40%+0.15%p)에서 오르고 상호금융(4.35%-0.01%p)에서 내렸다. [ajawody0316@](mailto:ajawody0316@)

## 외국인 7조 순매도에 코스피 6240선 후퇴

코스피가 외국인의 역대 최대 매도세에 밀려 6240선으로 밀려났다. 코스피는 지난 27일 전장보다 63.14p(1.00%) 내린 6244.13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109.78p(1.74%) 내린 6197.49로 출발해 한때 6153.87까지 낙폭을 키웠다. 이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전환해 6347.41까지 올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으나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인 7조1037억원 순매도한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6조2824억원, 5335억원 순매수했다. 이날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도액은 지난 5일 기록한 종전 사상 최대치(5조110억원)를 넘어섰다. 개인 순매수액 역시 지난 5일 6조7639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다. 개인과 외국인이 치열한 매매 공방을 벌이면서 코스피 거래대금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ajawody0316@gwangnam.co.kr](mailto:djawody0316@gwangnam.co.kr)

## 쌀값 잡아라...정부양곡 15만t 단계적 공급

### ‘대여방식’으로 1차 10만t 풀고 2차 물량 결정 산지 쌀 한 가마 23만원 넘어...소매가 15% ↑

농림축산식품부가 급등세인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15만t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회를 열고 쌀 수급 상황과 정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시장동향, 재고 등의 조사결과가 부족한 재고상황(평년대비 14만t ↓)과 산지유통업체가 희망하는 수요 물량(16만t)을 고려해 2025년산 정부양곡 10만t을 1차로 공급하고 이후 시장 상황을 보며 2차 공급 시기와 물량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급방식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대여’방식으로 쌀값 불안 시 정부의 반납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는 데 동의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양곡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산지 쌀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상승 폭이 커져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양곡을 공급할 것이라고 이날 앞서 밝힌 바 있다. 산지 쌀값은 올해 들어 두 달 만에 1.2% 올랐다.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한 지난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kg 5만7630원으로 한 가마(80kg) 23만원이 넘는다. 쌀 평균 소매가격은 전년 기준 20kg에 6만3000원으로 평년보다 15~16% 높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달 2025년산 쌀 10만t의 시장 격리를 보류하고 정부양곡 가공용 쌀 최대 6만t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의 쌀 수급 안정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쌀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쌀을

추가로 풀기로 결정했다. 정부양곡 공급 대상은 지난해 정부배 매입자금을 지원받은 산지유통업체 209곳이다. 지난해 농가로부터 벼를 3000t 이상 매입한 산지유통업체는 정부양곡 공급을 희망할 경우 매입 물량을 증빙한 뒤 희망 물량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양곡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농협경제지주 웹사이트 공지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희망 물량을 제출하고 반납 이행을 위한 담보를 설정해야 한다. 이번엔 공급하는 정부양곡은 벼로 재판매하는 것이 제한되며 양곡연도 말까지 쌀로 판매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판매 완료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정부양곡을 공급받은 업체는 8월에 반납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순차적으로 반납하게 된다. [aura@gwangnam.co.kr](mailto:aura@gwangnam.co.kr)

## 농어촌공사, 농촌공간계획 전담팀 확대

### 지자체 연계 소통·맞춤형 지원 본격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농촌공간계획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농촌공간계획 종합지원 전담팀(TF)을 확대 개편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농촌공간계획은 농촌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거, 산업 등 기능별로 공간을 구획해 농촌의 재생을 지원하는 제도다. 산타·일터·실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중앙 및 광역지정기관(강원, 충북, 전남, 경남, 제주)으로 지정돼 지방정부의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부터 자체적으로 농촌공간계획 종합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지방정부가 계획을 더욱 내실 있게 수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참여를 끌어낸다. 방점은이다. 공사는 13개 부서로 구성된 전담팀(TF)을 총괄지원, 실행지원, 일터혁신, 실행지원 등 4개 반으로 운영한다. 각 반은 해당 부서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농촌공간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자체가 융복합적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지방정부에 행정·기술 관련 맞춤형 컨설팅과 정책자료를 제공해 농촌공간계획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앞서 전담팀은 최근 착수 회의를 열고 농촌공간계획구조화 농촌특화지구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청년농업인에게 주거와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부터 자체적으로 농촌공간계획 종합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지방정부가 계획을 더욱 내실 있게 수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전담팀 개편의 핵심은 ‘소통 기능 강화’다. 공사는 기존 기술지원과 정책 개발 중심 조직에 홍보 기능을 추가해 전담팀을 확대했다. 농촌공간계획제도 시행 리 농촌이 누구나 살고 싶은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pose007@](mailto:pose007@)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공간계획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농촌공간계획 종합지원 전담팀을 확대 개편하고 TF kick-off 회의를 가졌다.